

특별기고



김석환
광주스프츠과학연구원장

슬기로운 인공지능(AI) 사용법

용어다. 오픈 에이아이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공지능 모델인 'GPT-3.5' 언어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용자가 챗봇과 대화하는 형태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문학 작품, 프로그래밍, 논문, 기사 작성, 번역, 작사·작곡, 코딩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학의 역사는 한계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성취는 시련을 극복했을 때 찾아온다. 지난해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에이아이(AI) 연구소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지피티(ChatGPT)'를 선보인 날이기 때문이다. 성과는 놀랍다. 공개된 지 3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이 훌쩍 넘었다. 더 기대되는 건 당시 공개된 버전이 3.5버전이고, 곧 4.0 버전이 출시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성급한 미래로 생각됐다. 그 인식의 간극이 바투 좁혀졌다. 슬기로운 인공지능 사용법은 무엇일까?

올바른 질문과 해석하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미래학자 제임스 데이터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이제 인간의 언어를 탐낸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알고리즘을 쏟아낸다. 챗지피티(ChatGPT)의 챗은 채팅(chat)의 줄임말과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글자를 딴

규모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정보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각자의 결정과 책임에 달려 있다. 챗지피티 또한 인공지능의 도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일 뿐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챗지피티 돌풍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해석할 줄 아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문해력) 능력이 중요하다.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위험사회다. 이 과정을 통해 정당한 가치를 깨우치고 합리적인 사유 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피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실은 현재와 다르다는 것뿐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른 필수조건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창의성을 키우고, 다양한 학문과 소통하며 융합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인공지능의 달콤한 환청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특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넓은 식견을 갖춘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한다. 어둠이 무서운 건 형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는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다. 선택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각자의 몫이다. 모두의 건투를 빈다.

2023 전국체전, 전남 대도약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해온 것은 물론, 시도 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전남에서는 광주와 분리되기 전인 1951년과 1986년 두 차례 개최됐는데, 특히 1951년 대회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회로 이때 전남은 종합 우승까지 차지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이후 2008년 여수를 중심으로 개최한 '제89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2012 여수세계박람회'까지 성황리에 치르며 관광객 유치, SOC 확충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올해 15년 만에 목표를 중심으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통해 목표를 포함한 서남권 발전과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대회를 시도 선수단의 스포츠 경영의 장을 넘어, 전남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감동과 희망의 체전'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회 슬로건을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4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하려고 한다.

첫째, 더 위대한 전남으로 나아가는 '미래희망체전'이다.

전국체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개·폐회식을 세계일류와 경쟁하는 전남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독창적인 무대로 연출하여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과 희망 체전'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한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에 분야별 홍보관을 구축해 전남이 자랑하는 글로벌 경쟁력인 에너지, 첨단 전략산업과 농수축산업을 널리 홍보하려고 한다.

둘째, 진심 어린 환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민감동체전'이다.

도내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친절·위생·편의를 갖춘 숙박시설과 음식점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등의 지원과 안전한 체전에 주력해 '다시 가고 싶은 전남'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려 한다.

셋째,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체전'이다.

전남도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체전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함께 즐길 지역별 특색있는 축제를 구성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다른 메가이벤트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려고 한다.

넷째, 도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도민화합체전'이다.

자원봉사단과 도민서포터즈 모집·운영을 통해 자율참여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체전의 서막을 알리는 성화 봉송은 22개 시군 성화맞이 문화행사와 연계 추진하고, 양 체전 동시 봉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하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는 39,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전국민적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와 희망의 땅 전남'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대도약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남은 기간 각계각층 도민 역량을 총 결집해 진심 어린 손님맞이로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 매력이 넘치는 전남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줌으로써 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역대 최고의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시설

광주 '라이즈 사업 고배' 왜 조용한가

진부할 정도의 표현이 된 '벚꽃피는 순서로 대학이 사라진다'의 의미는 엄중하다. 지역 대학의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는 오래전 일로 백방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기대만큼이어서 정부에 대놓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대학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을 인식하고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ZE)사업이다. 광역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있게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권한을 넘겨받는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이 사업 공모를 마감한 결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충북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 총 13개 지자체가 지원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은 지원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광주가 빠졌다는 점이다. 영남권이 대거 포함되고 호남권 중심 광주는

탈락했지만 지역사회는 왠지 조용하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자면 분명히 광주를 포함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광주는 도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소홀함은 없었는지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 간 협력과 조율이 있었을 것이므로 미진정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7곳을 선정했다고 했다. 특히 지자체와 향후 지역 내에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지역 대학에 배분하는 성과 및 평가 전담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 여부를 살폈다고 했다. 이번이 시범사업이어서 다시 재정비할 예정이긴 하지만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벌써 정부 '글로벌대학' 선정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지역 대학 당국은 이번 공모사업 고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교권보호 제도적 장치 절실하다

그동안 교사의 꽃은 담임교사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나 신규교사까지 담임 맡기를 모두 꺼리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많고 있는 실정이다. 담임 교사의 업무량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청소 지도, 급식지도, 상담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계속해서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교권 침해다.

더 큰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만을 품고 민원을 넣는 지나친 학부모도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측이 교사에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교사에게 학부모 B씨가 2,5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전국 교사 1,800여명이 A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담임교사로서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혹시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 인권 강조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는 더 어려워지고, 교권 침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으며, 교직 만족도와 학생지도 열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호되고 중시돼야 하지만,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 교단을 떠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대답한 비율(20.1%)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했다. 다시 직업을 선택한 다른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36.6%에 달한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오죽하면 교단을 떠나겠는가.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기지수첩



김용현

정치부 차장

올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이 예고되면서 지자체의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와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대상 기관 선별, 계획 수립, 의견 조율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임차 기관이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즌2 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 유치,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대응, 선 혁신도시 후 광주 도심 유

치,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전남도도 지난달 16일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갖고 농협·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0여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먼저 농협의 전남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농·수협중앙회 이전은 전남을 비롯한 부산(수협)과 강원, 전북, 경북 등이 뛰어들었으며 광주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충북도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한국전력이 들어선 나주 빛가람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에너지 관련 산업 발달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직권 가족 이주, 정주 여건 미비, 공동기금 조성, 성과 확산 등은 당초 조성 목표에 비해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빛가람공동혁신도시의 사례를 토대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도의 실무자나 책임자들은 수시로 만나 방향성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

Table with newspape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for Jeonnam Daily.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paper, featuring the logo and slogan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